

특하면... '항소 검찰' 소송 낭비 심하다

6·25 때 민간인 집단피해 손해소 국가 잇단 패소에도 '기계적 항소'

“패소 책임 안 묻나” 법원도 무분별한 항소 꼬집어

6·25를 전후해 경찰·군인 등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피해사건 피해자·가족 등에 손해배상을 배상해줄라는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 조사 결과 발표(2008~2010년) 이후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국가 패소 판결이 끊어질 않는데도, 대부분의 피해자·가족들은 배상을 받아내기까지 2년 가까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틀에 갇힌 기계적 항소’가 소송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 재판 과정에서 “패소 책임을 안 묻는 것이냐”며 국가 소송을 전담하는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를 꼬집는 식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전남에서만 294건, 소송 가액만

2500억=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전남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진행중인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294건으로 전체 소송 가액만 25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소송 건수 중 완료된 145건의 경우 피해자·가족 등이 승소한 사건은 109건(일부 승소 건수 포함)에 이르는 반면, 국가가 이긴 경우는 17건에 불과하다. 경찰은 “국가가 패소한 손해배상 사건 대부분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쟁점 국가 승소 사건은 1심에서 마무리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가족에게 배상한 지급액도 엄청나다.

소송을 낸 당사자에 따라 다르지만 법원은 민간인 희생 사건의 경우 통상 망인

전남 지역 관련 소송 보니

- 민간인 피해 손해소송 294건
- 소송 가액만 2500억원
- 소송 완료 145건
- 피해자·가족 승소 109건
- 국가 승소는 17건 불과

에게 8000만원, 부인에 대해서는 4000만원, 자녀들에게 800만원, 망인의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는 400만원 수준의 배상액 지급을 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나머지 손해배상 사건의 90%도 하급심에서 (일부) 패소된 국가가 항소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 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 상당수가 국가의 항소로 3심까지 끌고갔음에도 패소했다는 점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

는 게 검찰 판단이지만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것도 모자라 배상을 받으면서 사실상 3심까지 가는 지리한 소송전을 감당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셈이다.

◇법원 “패소 책임 안 묻나”=광주고법 제 1민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지난 4월 열린 ‘광양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된 재판 과정에서 소송 수행자를 향해 “소송 패소 책임은 묻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된 비슷한 소송이 같은 재판부에 상당수 계류돼 있는데다, 이들 사건 중 1심 판결에서 국가가 패소해 항소한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한 질문으로 해석됐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 기존 광주고법 판결도 사안별로 다르지만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피해 회복 조

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적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소송을 전담하는 검찰 대신 수행자로 나선 경찰·군인 등은 재판부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아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 국가 소송을 전담하는 고검이 소송 사건별로 충분한 검토 없이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계적’으로 항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 이 같은 점을 감안, 관련 소송과 국가 배상 금액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소송에 따른 낭비와 피해자 가족들의 심적 부담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피해를 일괄 배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해경 직원 구속영장 청구 광주지검, 진도VTS 근무 3명

세월호 침몰 당시 관제 업무 등을 소홀히 한 해경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실한 초동 대처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해경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해경 고위 간부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검은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관제업무를 담당했던 해경 직원 2명과 CCTV 관리자 1명에 대해 각각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VTS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무실 내 설치된 CCTV의 방향을 전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브로커에 명의 빌려주고 돈 챙긴 변호사들

광주지검, 2명 불구속 기소 무한경쟁 시대 법조계 ‘착각’

변호사들이 매월 400만~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장해급여 청구를 대신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대어줬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무한 경쟁에 돌입한 업계 현실과 사건 선임 ‘양극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나타나고 있는 실상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내 착잡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1일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의사와의 친분을 사정, 산재 환자들에게 접근해 높은 장해 등급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청구 업무를 대신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장해급여의 일부를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문 브로커 A(44)씨를 구속 기소하고 B(37)씨 등 다른 브로커 5명을 갈

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브로커 1명은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400만~500만원씩, 2년여 동안 1억2700만원, 5190만원을 받은 변호사 2명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공인노무사법 위반)로 공인노무사 I(49)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노무사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산재 환자 43명에게 접근, 장해급여를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청구 업무를 대신해주고 환자들이 받은 장해급여의 20~50%를 챙기는 등 모두 3억 4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브로커들도 같은 방법으로 200여만~6000여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특히 변호사가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지역 법조계 반응은 착잡하다. 변호사 개인 범죄라고는 하지만 달걀인 법조계

실상도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대거 진입으로 지난해 6월 280명 수준이던 변호사가 올 들어 308명(3월), 314명 등 꾸준히 늘어나면서 사건 선임 경쟁이 치열해지고, 갈수록 심각해진 ‘변호사 양극화’ 현상 등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당장, 지난 10년간 지역 변호사 업계 선임료의 심리적 지지선인 330만원은 깨진 지 오래고 한 해 동안 20~30건의 사건만 수임하는 변호사들도 적지 않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이런 수준에서는 건물 임대료와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하다는 게 변호사 업계 하소연이다. 더 나아가 무한 경쟁에 따른 미흡한 재판 준비 등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되는 형편이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열악한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걱정도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더위엔 물이 최고” 광주·전남 낮 최고 기온이 31도를 웃도는 등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 1일 담양 죽녹원 앞 물놀이장 앞에서 한 어린이가 뿜어져 나오는 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시신 1구 추가 수습 세월호 탑승 여부 확인 안돼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인근 해상에서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됐다.

1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5분께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동쪽 2.5마일(약 4km) 해상에서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를 수색 중이던 해경이 발견했다. 이 남성의 키는 170~175cm이며 구멍조끼를 입지 않았고 검은색 등산복 바지 차림이었다. 이 시신은 이날 현재 세월호 탑승 희생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대책본부는 시신 상태 등으로 미뤄 승선지 수습일 이상 지난 것으로 보고 DNA 검사를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초등생에 휴대전화 빌린 뒤 줄행랑

○초등학생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주고 돌려줄 것 처럼 속여 건네 받은 뒤 그대로 줄행랑 친 10대가 절도 혐의로 경찰서행.

○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절도 등 전과 2범인 박모(15)군은 지난 5월 27일 오후 3시에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농협 앞길에서 초등학생 오모(11)군의 이 시지 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렸다가 그대로 달아났다는 것.

○사건 현장 CCTV와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박군을 붙잡은 경찰은 “길에서 낯선 사람이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할 경우 자칫 분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이나 여성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기초연금 신청 첫날...광주 접수·문의 잇따라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최고 2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이 발효됐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노령연금 수령 대상자는 10만5000여명으로,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 처리된다. 신청 첫날 남구 봉선동 주민센터에서 18건이 접수되는 등 광주지역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접수 및 문의가 잇따랐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한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주민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만 65세 미만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서 가능하며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계약서도 지참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동으로 신청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해야 연금이 나오는 만큼 수령 대상자 여부를 꼭 확인해서 연금을 수령하시길 바란다”며 “한편으로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생각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신 신청해 주겠다고 개인 정보를 빼내는 사기사건도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한빛타워 분양/임대 비교할수록! 따져볼수록!

위치 가격 수익성 넘버원!

권/창/업/중

- 1층 금웅권, 약국, 커피숍, 안경점, 24시 편의점 등
- 2층 인과, 가정의학과, 미용실, 대형매일리스토람 등
- 3층 소아과 내과, 치과 등
- 4층 각종학원 등
- 5층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성형외과 등
- 6층 보험회사, 각종사무실
- 7층
- 8층 스카이라운지, 대형휘트니스센터 등

나주혁신도시 내 중심 상권 프리미엄 빌딩

한빛타워 투자포인트

- 투자의 안전성** 신탁회사(아시아신탁) 자금관리로 수분양자 보호
- 합리적인 분양가 실용적인 설계** 인근 상가빌딩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 높은 층고(4.2m~5.4m)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전용률 극대화로 수분양자 이익실현(1층 66.9%, 2층~4층 71.44%)
- 뛰어난 접근성** 혁신도시 핵심상권에 위치하여 고객출입력이 우수한 프리미엄 상가 5층에 스카이가든을 조성하여 운동, 휴식공간으로 활용

매주 투자설명회(수요일 13:00, 토요일 14:00, 분양사무실)

주식회사 오 늘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010-5587-3080

시행: 한빛가림(유) 책임시공사: 견해중합건설(주) 신탁사: 아시아신탁

한빛타워 분양사무실

우정사업정보센터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중양호수공원